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303회 임시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

2024. 4.

복지문화위원회
전 문 위 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4. 4.
복지문화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
- 발 의 자: 박왕규 의원 등 6명
- 발의일자: 2024. 4. 5.(금)
- 회부일자: 2024. 4. 5.(금)
- 검토기간: 2024. 4. 8.(월) ~ 4. 12.(금)

2. 제정이유

- 달서구 위기청소년의 발굴·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사회적응과 성장 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지원계획 수립·시행(안 제4조)
- 라. 지원사업 및 위탁(안 제5조~6조)
- 마. 협력체계 구축 및 활용(안 제7조)
- 바. 비밀 누설의 금지(안 제8조)

4. 검토의견

- 이 제정조례안은 위기청소년이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것임.
- 여성가족부는 2021년 「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방안」을 발표하고, ‘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’을 구축해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을 통해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및 지원 서비스 연계 방안을 마련하였으나
- “자살예방백서”(보건복지부, 2023년)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율은 2017년 7.7명(인구 10만 명당)에서 2021년 11.7명으로 51.9% 증가했고, “청소년건강행태조사”(질병관리청, 2022년)에 따르면 청소년 자살시도율은 2020년 2.0%, 2021년 2.2%, 2022년 2.6%로 0.6%p 증가하는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함.
- 이에 따라 2024년 4월 현재 부산광역시, 전라남도 등을 비롯한 17개 자치단체에서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회에 기여하도록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 또한 충분하여
- 위기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, 이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대하여 명시한 이 조례안은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고,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□ 청소년 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소년”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.

2.~8. <생략>

제8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제49조(청소년복지의 향상)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·태도·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,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, 직업재활훈련,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·신체적·경제적·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 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□ 청소년복지 지원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~3. <생략>

4. “위기청소년”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.

5. “가정 밖 청소년”이란 가정 내 갈등·학대·폭력·방임, 가정해체,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.

제13조(상담 및 교육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담 및 교육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아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가족 및 보호자가 제1항의 상담 및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(實費)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위기청소년 특별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·경제적 지원(이하 “특별지원”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

② 특별지원은 생활지원, 학업지원, 의료지원, 직업훈련지원,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. 다만,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.

③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기준,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